

Welfare
Issue
Today

2013
6. 3
vol. 3

복지이슈 Today

- | | | |
|---------------|----|--|
| 권두언 | 3 | 복지는 통합이다 |
| 국내동향 | 4 | [복지정책] 지역복지 통계 구축 및 활용 |
| | 5 | [복지행정]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복지인력 활용방안 |
| | 6 | [장애인] 장애인 주거보장을 위한 다각적 접근 |
| | 7 | [어르신] 독거노인 문제의 해법, “근거리 가족” |
| | 8 | [주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소셜믹스 전략 |
| 이슈와 통계 | 9 | 기부는 줄고 빚·사교육비는 늘고...삶의 무게에 짓눌린 중산층 |
| 해외동향 | 10 | [미국] 저소득 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
| | 11 | [미국] 노인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
| | 12 | [영국] 빈곤에 대한 신화 깨기: 빈곤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실천 |
| | 13 | [독일] 공동의 주거공간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다세대공동주거 |
| | 14 | [독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 디아코니의 사례 |
| | 15 | [독일] 이민자들을 위한 다면적 사회통합 지원 정책 |
| | 16 | [스웨덴] 지역통합을 위한 야르바 프로그램 |
| | 17 | [일본]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 | 18 | [일본] 장애인의 도시락 배달을 통한 고령자 안부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편집위원회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편집위원장)
김승연(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장)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 차장)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집필진

권민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미현(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장)
김원경(일본복지대학 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 연구원)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장)
박은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이상정(메릴랜드주립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박사과정)
이상철(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이서윤(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 연구원)
이순성(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장)
전채경(런던정경대학교 사회정책학 석사)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현명이(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부 통합복지팀 연구위원)
홍석호(메릴랜드주립대학교 노인복지전공 박사과정)

복지는 통합이다

: 계층, 세대, 지역, 문화 간 단절을 치유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생각한다

6월은 국토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온 나라를 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6.25전쟁이 발발한 달이자, 민주화에 전기를 마련한 6.10민주항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사회의 모습에서 민족과 국민이 갈라리 찢겼던 6월의 상흔 위에 새로운 생채기들이 쌓이고 있음을 본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커지고 있는 계층 갈등, 작년 대선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세대 갈등, 영구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빈곤층 밀집 주거지역 문제, 그리고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종간·문화간 갈등이 그것이다.

독일 통일을 위해 국민의 단결이 필요했던 비스마르크가 최초의 국가 단위의 복지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복지시스템은 국민 내부의 간극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복지는 빈곤으로 인해, 장애로 인해, 고령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제(exclusion)되는 계층을 떠안아 사회시스템 안으로 다시 통합(integration)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번호 「복지이슈 Today」에서는 낯이 단절되어가는 집단 간 간극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동향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거자립 지원, “근거리 가족” 개념을 도입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제 예방 정책을 소개하였고, 해외동향에서는 빈곤층, 장애인, 노인,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 「이슈와 통계」에서는 소득분위별 기부참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격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산층의 모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 보았다.

이밖에도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하여 지역복지통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과 복지정책분야의 영원한 화두인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복지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번호 「복지이슈 Today」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시스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복지 통계 구축 및 활용

지자체는 주민의 욕구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해야 하며,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진행·평가 등 과정에서 요구되는 풍부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2011~2014)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장기적 비전·목적·전략과제, 8대 부문별¹⁾ 사업계획 수립, 전달체계 개편방안, 보건·복지연계방안, 행·재정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차원에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25개 자치구의 지역복지계획 관련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으며, 표본의 대표성 및 타당도·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도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보장기본법(제4장 제23조, 사회서비스의 보장)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²⁾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통계조사는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조사의 경우에는 분산적·분절적 시행으로 인해 중복·누락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지자체의 다양성 및 특수성,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도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는 별도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역복지계획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시기는 시·군·구의 경우 시행년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도의 경우 시행년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3기 지역복지계획(2015~2018)은 2014년 11월까지 제출·완료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2013년 하반기에 지역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초 25개 자치구에 제공한다면, 자치구는 이를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관성 있는 통계 자료 확보 및 통계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관련 전문가 및 실무진의 면밀한 조사계획 수립,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적절한 예산 분담 및 배정,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 _ 김미현

▶ 관련자료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 서울시복지재단(2010), 제2기 서울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연구

1) 저소득층, 노숙인,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보육, 아동 및 청소년, 보건의료
2)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용어 변경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대하였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복지인력 활용방안

서울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복지기능강화를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¹⁾. 복지수요 및 정책의 확대에 비해 전문인력이 확충되지 못함으로써 복지현장의 업무과중과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복지인력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방문상담전담계약직'을 시범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상담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을 선발하여 복지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통장의 역할에 복지업무를 추가하여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알리게 하여 틈새·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등 주민간의 상호 소통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경우, 사회복지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희망결연 '만능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복지대상가구의 욕구를 파악·분석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복지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발굴에서 지원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예방과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 관련자료

- 류명석 외(2012),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2013), '의정부시 복지전달체계 모범'
-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개발' 관련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 발췌

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이슈 Today」 2013년 5월호(vol.2) 5페이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참조

금천구의 경우, 지역단위의 상시민간사회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통통희망나래단'은 지역풀뿌리에 중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상시 신고체계를 운영하여 이웃돕기를 위한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이웃주민이 어려운 이웃주민을 발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욕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지역주민 주도의 나눔활성화 사업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각 동에 동복지위원회를 위촉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상담, 방문, 후원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15개동 3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봉사활동 경험과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및 전문 소양을 갖춘 지역주민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복지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복지요원 인력풀을 구성·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글 _ 현명이

장애인 주거보장을 위한 다각적 접근

21세기 장애인복지의 주된 흐름은 단연 당사자 중심의 참여, 인권운동의 확산 등에 따른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IL)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자립생활체험홈/가정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체형 및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housing support)는 장애인이 확보된 주거공간에서 자립을 체험하고 정서·사회·물질적 지원 속에서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주거 지원 서비스로 장애인 스스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주거 정책을 보완하여 장애인에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접근이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의 주거지원 서비스는 다각적 시도를 통해 발전 중인 반면 주거제공은 취약한 상황이다.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비중이 OECD 평균인 11.1%의 반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주거물량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투자를 무작정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취약계층 주거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 투자 이외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늘려 민간 부문이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공급 자체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이지만, 한정된 주거물량 하에서 장애인 가산점, 할당제 등이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장애인 가산점·우선순위·쿼터제를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보다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세련된 대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하위소득 25%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하위소득 40%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는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다. 입주자의 수입이나 주택의 규모, 입지조건, 건축연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한 분야만의 정책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서울시에서도 이 미 분야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인접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글 _ 이서윤

▶ 관련자료

- 서종균(200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국토연구, 61, pp.81~102.
-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경향신문(2013.4.11)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3~16% 인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12236465&code=950201
-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go.kr/>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홈페이지 'Meet the Need for Quality Affordable Rental Homes'
http://portal.hud.gov/hudportal/documents/huddoc?id=HUDStrategicPD_goal2.pdf

독거노인 문제의 해법, “근거리 가족”

서울시의 독거노인은 2012년 238,551명으로 10년 전(2002년 90,76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1인 가구의 증가경향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¹⁾.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독거노인 문제는 최근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근래 독거노인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적 변화로는 올해부터 전국사업에 돌입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응급안전돌봄서비스²⁾”와 서울시의 “자살예방대책³⁾”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주요 사건의 발생 상황을 목표로 한 보다 직접적인 서비스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독거노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호주의 노인입양(Adopt-a-pensioner) 프로그램이나 1975년부터 지속된 프랑스의 지역단위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s) 등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족 개념을 기초로 한다면,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독거노인 정책 구상도 가능하다. “근거리 가족”으로 통용되기도 하는 일본의 “보이지 않는 가족(invisible family)” 개념에 대한 접근이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자녀를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부모가 근거리에 살면서 다양한 생활영역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가족형태를 말하는데, 일본에서 고독사 문제가 완화된 것은 이러한 가족형태 트렌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서울서베이(2012)에서는 나이든 후 희망하는 가족 동거형태로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주거공간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족 간의 교류를 지속하고 싶은 욕구를 보여주고 있어, 독거노인 문제 대책에서 무엇보다도 가족체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세대통합형 주택과 근거리 거주 가족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은 지금과 같은 분절적인 대상 분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여, 근거리 거주 가족이 여가 생활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글 _ 정은하

▶ 관련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 노무라중합연구소, 정경진 역(2009). 『일본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 류재광(2013). 『10대 키워드로 보는 초고령사회 일본』, 삼성생명연세연구소.
- 서울신문(2012.12.01). 1인 400만명 시대, 2030마저 고독사 예비군.
- 서울통계 홈페이지 <http://stat.seoul.go.kr/index.jsp>
- 호주 노인입양 홈페이지 <http://adopt-a-pensioner.yourwebpace.com.au/index.php>

1)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는 2000년 502,245가구에서 2010년 845,606가구로 10년 새 68.4% 증가하였으며, 1~2인 가구는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온라인IT기술과 오프라인 기관을 연계한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구급서비스
3) 독거노인 2만 명 대상 마음건강평가와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 양성 및 활동 강화, 2013년 1,000명 양성 계획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소셜믹스 전략

소득계층간 갈등, 주거지 격리와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에서 다른 형태의 낙인 또는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별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자간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는 서비스 및 공용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배제되었다(한국일보, 2012.02.25). 또 다른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는 단지 내 펜스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통행을 막으면서 또 다른 형태의 낙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겨레21, 2012.09.20).

서울시는 임대주택단지도 '소셜믹스'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임대주택 8만호+α 이야기」 대책(서울시 보도자료, 2013.01.16)은 '소셜믹스' 구현을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배치하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 혼합단지¹⁾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이 후 2013년 4월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서울시 보도자료, 2013.04.12)은 사회통합형 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믹스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 대책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저소득 취약계층 전용'이라는 등식을 깨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영

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진정한 소셜믹스는 주거복지 취약계층이 일상적인 근린관계 속에서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분양·임대 혼합단지 또는 임대주택간 혼합을 통한 '소셜믹스'를 제안하기 보다는 임대주택 수요 분석을 통해 입주자의 선택에 의한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공되는 서비스나 근린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주거복지 취약계층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부서별로 개별 지원되기 보다는 통합된 부서(또는 기관)에서 전체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부서는 대상(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 여성 등)별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 _ 서종녀

▶ 관련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13.01.16), "임대주택 8만호 + α 계획 발표".
- 서울시 보도자료(2013.04.12), "서울시, 임대주택을 살가운 주거복지공동체로 재탄생 시킬터..."
- 아시아경제(2013.03.15), "박원순 式 소셜믹스 1호 나온다".
- 아시아경제(2013.04.29), "서울시, '재개발 소셜믹스' 첫 도입".
- 한겨레21(2012.09.20), "'혼합' 넘어 '통합' 으로", 929호.
- 한국일보(2012.02.25), "'엘리베이터 따로 타세요' 임대 입주민은 찬반대우".

1) 구로구 천왕동 임대주택단지는 1-2층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3층 이상은 분양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도록 계획함(아시아경제, 2013.03.15). 관악구 봉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임대와 분양이 섞인 혼합동을 3개동 만들고 이 중 1개동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에 배치할 계획임(아시아경제, 2013.04.29).

기부는 줄고 빚·사교육비는 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중산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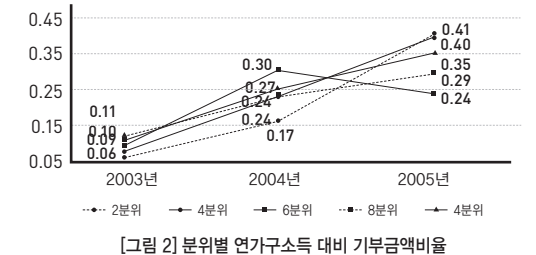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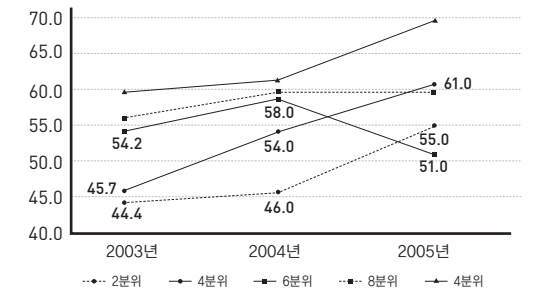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독 중산층만 기부참여율과 연가소득 대비 기부금액 비율이 모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03년과 2009년, 2011년도에 실시한 아름다운재단의 '한국 기부자 특성'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6분위 계층의 기부참여율은 2003년 54.2%에서 2009년 58.0%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51.0%로 2년 새 7%포인트나 하락했다(그림1). 소득6분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가소득 대비 기부금액비율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소득의 0.09%에서 0.3%까지 점차 늘어났으나, 2년만인 2011년에는 0.24%로 뚝 떨어졌다(그림2). 한국 중산층은 100가구 중 51가구만 기부에 참여하고, 가구소득 중 0.24%만 기부함으로써 기부참여율 뿐만 아니라 소득대비 기부금액비율에서도 전체 계층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층인 10분위나 8분위 계층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2~4분위 계층까지 기부참여율 및 소득대비 기부금액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사실과 크게 대비된다. 그런데 유독 중산층에 속하는 6분위 계층에서만 기부 후퇴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 2010)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보여주는 흑자율에서 중산층(17.9%)은 전체 가구(22.5%)에 비해 낮았다(2010년). 구체적으로 보면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반

영되어 사업소득(2000년 29.2%→2010년 21.2%)과 재산소득(2000년 1.3%→2010년 0.3%)이 감소한 반면,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2000년 13.6%→2010년 27.5%)과 사교육비지출(4.4%→6.0%)은 다른 계층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오락·문화·여행·외식 등 선택적 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2000년 4.7%→2010년 4.1%)했다. 종합하자면 한국의 중산층은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가계빚과 사교육비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산층의 소득 및 소비구조 악화가 기부참여율과 소득대비 기부금액비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글 _ 이상철

▶ 관련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 아름다운재단(2003, 2009, 2011), Giving Index, 아름다운재단(2012), 기빙코리아2012, 난

해외동향 _ 미국(콜로라도, 아이다호 등)

저소득 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 나라의 빈곤율 측정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위한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정의하는 일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2013년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빈곤선인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3,283달러(약 25,378,000원¹⁾)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약15%(4천5백8십만 명)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과 지역적 차이 등 좀 더 실질적 요건들을 고려한 측정법(Supplemental Poverty Measure)에 따르면, 약 2백6십만 명이 추가로 빈곤선(Poverty Line)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소득 가구의 재정정보증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가난한 노인과 신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 지원(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의 일반지원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²⁾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빈곤가구 지원 정책이 현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근로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

성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섯 개 주(콜로라도, 아이다호,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선정하여 근로지원전략 사업(Work Support Strategies Project)이 시범 운영되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과 식료품 지원, 자녀양육 보조금 등 기존에 저소득 근로가구에 제공되어 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2012년 프로젝트의 계획단계(Phase 1)와 2013년 실행단계(Phase 2)의 첫 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 사업이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바마 케어의 수행을 앞두고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체계를 공동으로 정비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은 프로그램들 간의 개별적 접근법보다 효과적이었다. 둘째, 양질의 통합관리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의 향상만큼이나 지자체 상하 부처 간의 적절한 인력의 안배와 조직 협력 문화의 성숙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마지막으로 개혁 의제를 담보할 수 있는 꾸준한 투자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글 _ 이상정

▶ 관련자료

- Erin McClam(2013. 5. 3). 'There may be millions more poor people in the US than you think' 「NBC News, <http://inplainsight.nbcnews.com/news/2013/05/03/17671753-there-may-be-millions-more-poor-people-in-the-us-than-you-think?lite>
- Stu Kantor(2013. 4. 3). 'Policy Common Ground: Improving State Programs to Foster Work, Well-Being, Self-Sufficiency, and Program Integrity' 「Urban Institute, <http://www.urban.org/publications/904580.html>

1)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8,556,788원과 비교하여 약6,800,000원 높은 금액이다.
2) 푸드 스탬프와 주거비 지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해외동향 _ 미국(뉴욕, 메릴랜드 등)

노인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지난 5월 1일, 미국 내 주요 일간지들은 건강관련 주요 기사로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의 관련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보도하였다.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머릴 버터스(Meryl Butters) 교수는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하여 혈관성 치매에 2배 이상, 알츠하이머병에 65%이상의 노출 위험을 갖는다고 밝혔다.

미국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울증과 치매를 비롯하여 노인들을 위협하는 여러 정신질환들(불안과 망상 장애, 양극성 장애,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수면 장애 등)은 그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 노인빈곤 문제, 구조적인 통합 관리의 한계(사업 협력 부족, 서비스 중복, 전문가 양성 미흡 등)로 인해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비영리 기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 정신 질환의 위험성을 알려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제공하는 종합적 원조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펜실베이니아 우울증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Pennsylvania Statewide Depression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 뉴욕 정신 보건 교육 프로

그램(Alert and Alive), 워싱턴 정신보건 서비스 소개 및 초기 진단 프로그램(HEROS: Helping Elders through Referral and Outreach Services) 등이 있다.

둘째, 정신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이다. 필라델피아 기관협력 상담서비스(Interac Geriatric Counseling Service), 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1차 진료 서비스와의 통합관리 프로그램(Integration with Primary Care), 동년배 자원봉사 지지 프로그램 (Peer Support and Consumer-Run Services), 간병인 지지 서비스(Care-giver Supports), 위기관리 서비스(Crisis Services)¹⁾, 장기요양보호서비스(Long-Term Care)²⁾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재정지원 확충, 실천과 근거 중심의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률 개선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뉴욕시에서 제정한 노인정신건강법(Geriatric Mental Health Act)과 메릴랜드의 교차훈련을 위한 파트너십(Cross Training Efforts in Maryland)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노인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글 _ 홍석호

▶ 관련자료

- Judith Graham(2013. 5. 1). 'Does Depression Contribute to Dementia?' 「The New York Times, <http://newoldage.blogs.nytimes.com/2013/05/01/does-depression-contribute-to-dementia/>
- Mental Health News, 2011 봄호 http://www.mhnews.org/back_issues/MHN-Spring2011.pdf

1) 뉴욕의 BEST(Baruch Elders Services Team)가 대표적이다.
2)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가 대표적이다.

빈곤에 대한 신화 깨기 : 빈곤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실천

영국정부의 복지개혁에 의해 영국 내 아동빈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빈곤가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빈곤에 대한 신화 깨기(myth-busting)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들이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빈곤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빈곤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동빈곤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인 아동빈곤행동그룹(Child Poverty Action Group: CPAG)에서는 아동빈곤과 관련된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CPAG가 지적한 아동빈곤에 대한 대표적인 신화는 ‘첫째,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 빈곤의 주요 원인이다. 둘째, 가족붕괴가 빈곤의 주요 원인이다. 셋째, 영국의 생활보호제도는 의존성을 유발하여 취업을 꺼리게 만든다’ 등이다.

올해 3월, 영국의 침례교, 감리교, 연합개혁교회

(United Reformed Church) 연합단체인 「합동 사회적 이슈 팀(Joint Public Issues Team)」은 스코틀랜드 국교회(Church of Scotland)와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 빈곤에 대한 편안한 신화 끝내기(The lies we tell ourselves: ending comfortable myths about poverty)」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일반 대중들 속에 널리 퍼져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들을 ‘빈곤에 대한 6가지 편리한 신화’로 제시하고, 통계자료와 사례들을 근거로 그러한 믿음들이 왜 잘못되었으며 올바른 빈곤대책이 수립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데이빗 캐머런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빈곤 정책인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과 뒤이은 빈곤가정 지원 프로그램(Troubled Families)이 빈곤의 책임을 개별가정에 돌리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빈곤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사회적 주의 환기를 위한 이들 캠페인의 귀추가 주목된다.

글 _ 김지영

참고자료

‘합동 사회적 이슈 팀’이 제시하는 빈곤에 대한 6가지 신화와 반증(counterevidence)

1. ‘그들’은 게으르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vs. 일하는 빈곤가정이 더 많다.)
2. ‘그들’은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vs. 중독문제가 있는 생활보호수당 수령자는 4% 미만에 불과하다.)
3. ‘그들’은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다-그저 자신들의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뿐이다 (vs. 빈곤층은 자신들의 돈을 신중하게, 오직 필수품을 위해서만 쓴다.)
4. ‘그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vs. 생활보호수당 부정수급율은 역사상 최저수준인 0.9% 이하로 떨어졌다.)
5. ‘그들’은 편안하게 살아간다(vs. 생활보호 수당은 최저수입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평균수입에 비거울 때 수당의 실질적인 가치는 지난 30년 동안 반으로 줄었다.)
6. ‘그들’이 재정적자의 주범이다(vs. 복지에 쓰이는 세금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Joint Public Issues Team(2013) 「The lies we tell ourselves: ending comfortable myths about poverty」 참조 <http://www.jointpublicissues.org.uk/wp-content/uploads/2013/05/Truth-And-Lies-Report-smaller.pdf>

▶ 관련자료

Kate Pickett(2013. 5. 8) 'Rising child poverty in the UK makes us all poorer'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08/rising-child-poverty-uk-poorer>
Child Poverty Action Group(2013) 「Child poverty myths」 <http://www.cpag.org.uk/content/child-poverty-myths>
Joint Public Issues Team 홈페이지 <http://www.jointpublicissues.org.uk/>

공동의 주거공간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 다세대공동주거

독일은 2006년부터 연방 가족여성부가 주도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거형태인 ‘다세대공동주거(Mehrgenerationshäuse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세대공동주거란 연령, 가족형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사는 주거 형태로 주거 구조는 목욕탕, 화장실, 취미방(Hobbyräume), 정원 등과 같은 공용 공간과, 거주하는 사람들 및 방문객을 위한 일종의 공공거실 역할을 하는 ‘열린 공간(der offene Treff)’, 개인용 침실과 작업실과 같은 개인 공간으로 분류된다.

다세대공동주거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단락 지어진 다세대공동주거 I(Mehrgenerationshäuser I)과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다세대공동주거 II(Mehrgenerationshäuser II)로 구분된다. 다세대공동주거 I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다시 시작한 다세대공동주거 II는 다음의 4가지 과업에 중점을 둔다.

- 1) 노인 돌봄(Alter und Pflege): 돌봄이 필요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제공
- 2) 통합과 교육(Integration und Bildung): 통합과 교육을 장려하는 서비스 제공
- 3) 가사서비스(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안정적인 가사서비스 연계

▶ 관련자료

다세대공동주거(Mehrgenerationshäuser) 홈페이지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 홈페이지 <http://www.bmfsfj.de/BMFSFJ/Freiwilliges-Engagement/mehrgenerationenhaeuser.html>
다세대공동주거 II 프로그램 사업설명서(Programmbeschreibung Aktionsprogramm Mehrgenerationenhäuser II)

4) 자원봉사 기관 확보(Freiwilliges Engagement):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봉사 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2013년 현재 다세대공동주거는 전국에 45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450개 주택 각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담당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와 유럽 사회기금(Europäischen Sozialfonds)으로부터 3만 유로(약 4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Land oder Landkreis)로부터 1만 유로(약 1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다세대공동주거의 목적은 무엇보다 주택에 거주하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세대공동주거의 중심점이 되는 ‘열린 공간(der Offene Treff)’은 상호작용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대 간 교류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1인 가구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각 사회집단 간 연대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다세대공동주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_ 권민정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 : 디아코니의 사례

독일 장애인 사회통합의 핵심은 “포괄적이고 동등하며 자기결정적인 참여의 현실화(die Verwirklichung umfassender, gleichberechtigter und selbstbestimmter Teilhabe)”이다. 이것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과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을 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특수한 시설에서만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장애인 사회통합의 개념은 정책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현장으로 이어진다. 마크 루르 지역 디아코니(Diakonie Mark-Ruhr)¹⁾ 소속으로 이절론(Iserlohn)시에 위치해 있는 네츠베아크 디아코니(Netzwerk Diakonie)와 이절론 작업장(Iserlohner Werkstätte)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네츠베아크 디아코니의 서비스는 “주거, 지원, 동행(wohnen, fördern, begleiten)”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일상생활조식서비스, 만남카페(Kontaktcafé), 여가 및 교육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기결정과 자기주도의 원칙 아래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개별적인 맞춤형 돌봄이 제공된다.

주거지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

인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원할 경우에는 최대한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하고 건축과 설계를 지원하기도 하며, 자택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 지원서비스, 이동서비스,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자기결정과 자기주도의 원칙 아래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거주자들이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절론 시에 위치한 또 다른 디아코니 소속 기관인 이절론 작업장은 직업을 통한 자기개발과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거주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정도에 맞는 근무지와 근무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절론 작업장은 중소기업의 수준으로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단순한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에 납품하는 기성복, 건축자재, 전기제품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무서비스와 광고물 물류관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지역 내 일반기업으로 파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절론 작업장은 당당한 기업으로서 경쟁력, 파트너십, 신용, 기한연수, 유연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일반기업들에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글 _ 박은정

▶ 관련자료

- 장애인 연방정부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r.de/DE/Landkarte/1Was/Was_node.html
- 디아코니 마크 루르 홈페이지 <http://www.diakonie-mark-ruhr.de/eingliederungshilfe/>
- 네츠베아크 디아코니 홈페이지 <http://www.netzwerk-diakonie.de/inhalt.php?bereichid=6&id=23>
- 이절론 작업장 홈페이지 <http://www.iswe.de/>

1) 독일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들은 민간 협조체계 속에서 사회서비스 주요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도 이 중 하나인데, 이웃사랑이라는 개인교 이념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고자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디아코니에는 독일 개인교 교회 지역구분에 따른 21개 지역협회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따른 70개의 전문협회가 소속되어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다면적 사회통합 지원 정책

서울시에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거주인구의 약4%에 해당되는 약40만 명(2012년 기준)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서울시 인구의 10%를 외국인 주민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를린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베를린에는 거주 인구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47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 국적을 지녔으나 이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인구의 25퍼센트에 육박한다.

베를린 시에서 다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는 베를린 시 정부와 12개의 행정구역(Bezirk)이다. 베를린 시내 이민자 인구가 높은 행정구역은 주민 평균 소득이 낮고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사회로 온전히 통합할 수 있도록 각 행정구역과 자치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법적, 도시환경적 측면을 고루 고려한 통합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민 배경을 지닌 예술가와 문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베를린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하는 것을 장려한다.

베를린에는 과거 동독에 속한 지역이 있어 극우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다. 베를린 시는 40여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극우세력과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의 도시개발 및 환경 부와의 협력 아래 사회통합적인 도시 프로그램에 걸맞은 통합전략을 실행 중이다. 특히 근린지역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 소단위에 세워지는 센터들이 그 지역 내 이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도록 돕고,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베를린 시 이민통합부는 “당신의 도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여권 (Deine Stadt, Dein Land, Dein Pass)”캠페인을 발표하여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베를린 시 이민통합부장 디렉 콜라트(Dilek Kolat)는 지난 4월 8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캠페인 소개 행사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면 독일의 문화적 다양성이 강화될 것이다. 독일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민족, 출신, 피부색깔이나 종교로 규정받지 않을 것이며, 독일 사회는 다원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최근 연간 7,000여명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고 있다.

글 _ 전채경

▶ 관련기사

- 서울시 보도자료(2013. 5. 6) ‘서울시, 외국인 최대 밀집지 영등포에 첫 다문화마을공동체’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6058&act=VIEW&boardId=16058
- 베를린 시 자치정부 이민통합부처 새소식, “당신의 도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여권: 베를린 시, 시민권 취득 장려” http://www.berlin.de/lb/intmig/presse/archiv/20130408_1245_383158.html
- 독일 베를린 시 자치정부 2007-2011 다문화정책 명문 브로셔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lb-integration-migration/publikationen/berichte/integration_policy_in_berlin_2007_2011_bf.pdf

지역통합을 위한 야르바 프로그램 (Järva Programme)

스톡홀름 시 정부는 야르바(Järva) 지역의 사회개발을 도모하고 이곳을 스톡홀름 문화의 중심지이자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담은 <비전 야르바 2030>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야르바는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당시의 스톡홀름 지역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만 가구 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된 지역으로, 개발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낙후된 상태에서 남아 있던 지역이다. 야르바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도시 환경 선택권 및 양질의 주거공간 제공

야르바 내의 지역별 분리 현상이 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을 추진하고 이웃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통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공간을 다양화하고, 자가 소유 형태, 임대, 조합소유 등 거주권의 다양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

2. 일상적인 안전과 보안 강화

때로는 간단한 조치 하나로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아파트, 지하실, 창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변 환경 개선과 위협에 노출된 주민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허스비(Husby) 지역에서는 창고 재정비 사업 덕분에 자동

차 관련 범죄가 74퍼센트나 감소하였다. 이 밖에도 거리 조명 개선, 위험한 공터 제거 등 소유주, 거주민, 경찰들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재정비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치안을 개선하고 있다.

3. 교육과 언어 강습 지원

야르바 지역은 평균 연령이 스톡홀름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외국인 출신 인구가 많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특성에 맞게 지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법과 자료를 활용하고,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실을 통해 언어교육은 물론 직업훈련까지 지원한다.

4.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설립

스톡홀름의 취업 인구는 75퍼센트이지만 야르바 지역은 약 50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더 많은 사업장들이 만들고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인데, 새로운 전시센터, 도서관, 예술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이미 완공되어 문을 연 키스타 갤러리아(Kista Galleria)는 스톡홀름 근교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센터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 _ 전채경

▶ 관련자료

스톡홀름 시 정부 웹사이트 <http://international.stockholm.se/Politics-and-organisation/Welfare/>
비전 야르바 2030(Vision Järva 2030-City of Stockholm) 소개자료 <http://bygg.stockholm.se/jarvalyftet>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2011년, 도쿄 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쿄 내에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2.5%에 달하는 약32만 명이고, 그 중 특히 수발 혹은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은 약24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절반 이상이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독거노인 혹은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개호(介護)의 사회화’가 주창되었으며, 가족에 의한 수발에만 의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치매의 특성상,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시에 각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에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예방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관련 상담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센터는 최저 인원(사회복지사, 보건사, 주임케어매니저 각1명 필수 배치)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도쿄도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도쿄도 인지증대책추진회의”를 개최하여 도쿄도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검토 등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에는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 뿐만 아니라 치매가족 등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에 대한 진단, 치료, 전문의료상담 등을 실시하는 “도쿄도 인지증질환 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도쿄도에서는 매년 “인지증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다.

글 _ 김원경

▶ 관련자료

도쿄도 인지증 대책 추진 회의(東京都認知症対策推進会議)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zaishien/ninchishou_navi/torikumi/kaigi/
도쿄도 복지보건국(2011. 1월) 「도쿄도 인지증 대책 추진 회의, 도쿄도 인지증 치료 의료센터에 관한 검토 부회 보고서(東京都認知症対策推進会議 東京都における認知症疾患医療センターのあり方検討部会報告書)」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ourei/ninchi/suishin_kaigi/center_houkoku_files/honbun.pdf
‘치매’를 대체할 용어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痴呆」に替わる用語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http://www.mhlw.go.jp/shingi/2004/12/s1224-17.html>
치매관련 사이트 모음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zaishien/ninchishou_navi/soudan/link/index.html

1) 일본 후생노동성은 “치매”를 대체할 용어에 관한 검토회”를 통하여 2004년 12월 부터 ‘치매’ 대신에 ‘인지증(認知症)’을 행정용어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치매라는 한자어가 지닌 부정적인 의미 대신에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자어로 ‘인지증’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해외동향 _ 일본(도쿠시마)

장애인의 도시락 배달을 통한 고령자 안부 확인

일본 도쿠시마현 미요시 시(市) 이케다 지역(町) 하 시쿠라 지구에서는 장애인이 고령자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어르신 안부확인 하는 모델사업을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이케다박애회(池田博愛會)가 운영하는 취로지원시설 「셀프 하시쿠라」에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8명이 지역의 어르신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시설에서 만들고 있는 도시락과 빵을 비롯해 시내 상점가에서 대신 구입한 일용품을 배달한다. 시설 직원 1명과 장애인 2명이 조를 이루어 전화주문을 받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배달을 하며, 장애인은 교대로 업무를 맡는다. 배달과 더불어 어르신의 안부확인도 하고 대화를 하는 등 어르신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시쿠라 지구에는 혼자 거주하거나 고령자만의 세대가 약100세대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과 함께 지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상품 배달은 냉장고와 진열대를 갖춘 승합차를 사용한다. 이 차는 도쿠시마 현의 보조금 약 400만엔을 지원받아 이케다박애회가 구입한 것이다. 셀프 하시쿠라 시설의 담당자는 “쇼핑 난민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기쁘게 헤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쓰며 서비스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도쿠시마 현은 장애인우선조달추진법¹⁾이 올 4월에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이러한 모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며 효과를 검증한 후에 지역 내 타 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글 _ 이순성

▶ 관련자료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 도쿠시마 (2013.5.1)
- ‘한계집락 고령자 지원, 장애인이 택배와 안부확인(限界集落の高齢者支援、障害者が宅配や安否確認)’
-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2013.5.1)
- ‘수제 도시락 배달로 어르신 보살핌, 장애인이 한계집락 지원(手作り弁当配達で見守り 障害者が限界集落支援)’
- 도쿠시마신문(徳島新聞) (2013.4.16)
- ‘장애인이 한계집락²⁾ 지원, 도시락배달 안부확인 등 현이 사업지원(障害者が限界集落支援 弁当配達・安否確認など、県が事業支援)’
- http://www.wam.go.jp/content/wamnet/pcpub/syogai/tukushiiryounews/20130416_130000.html

1) 장애인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조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한 법률
2) 인구감소 등으로 인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루어져 관혼상제와 같은 사회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진 집락

복지이슈Today는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개선을 위한 의견은 발간팀(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 02-2011-0570, jykim@welfare.seoul.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Tel. 02)2011-0570 Fax. 02)2011-0520